

## 「진로교육법」 제정 1년을 돌아보며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2015년 6월 22일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년 12월 23일에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학교현장이나 학계에서 진로교육이 교육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늘 한계가 많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이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교육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말만해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직업의식 함양에 관심이 부족하여 유니세프(UNICEF)가 진로교육 프로젝트를 만들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했을 정도이다. 유니세프의 진로교육 사업을 통해 진로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자료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 및 시범 학교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생각하면 「진로교육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나 다름없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금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난 4월 초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어 그야말로 진로교육의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은 시기적으로 1980년대 말까지를 태동기,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발전기, 그리고 2010년 전후부터 「진로교육법」이 마련되기까지를 혁신기로 나눌 수 있다(서우석, 2016). 한국교육개발원이 유니세프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진로교육과 관련한 연구

및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던 시기가 태동기라면,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에 진로교육부 설치 및 교육과정에 진로·직업 교과 신설, 한국 진로교육학회 탄생, 국가진로교육정보망(커리어넷) 등이 설치·운영되던 시기가 발전기이다. 진로교육의 혁신적 발전은 2010년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마련한 '제1차 진로교육종합계획(2010~2013)'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법」 제정·시행으로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도 진로·직업 교과가 신설되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진로교육법」의 지원을 받고 있어 더욱 안정적으로 진로교육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이처럼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 생태계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도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채워지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진로교육법」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진로교육을 제공한다는 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 「진로교육법」이 처음 제정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담기에는 상황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유보된 내용들이 이제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진로전담교사의 명칭, 학교별 학생 수를 고려한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지역 진로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 규명, 「초·중등교육법」과 연계한 교사의 진로 관련 교육 및 연수의 의무화 등이 새롭게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현실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누락되어 있어 잘못하면 구두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미 제정된 「진로교육법」이 사문화된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이 되려면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밋빛 전망만이 보이는 게 아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대학입시에서 성적 외에 학생 개인의 다양한 경험 및 체험활동을 인정하는 대학수시입학의 학생부종합전형제가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가 좋은 교육적 의도로 출발했지만 급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또, 대학수시입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학교교육 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축소 내지는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 학교현장이 자유학기제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해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의 제정은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자유학기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고, 「진로교육법」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뿌리내린 암기식 수업, 교사 주도의 일방적 수업, 수능성적 위주의 입학전형이 다시 고개를 들어 학생들의 성장과 체험을 중시하는 진로교육의 싹, 아니 학교교육 변화의 싹이 짓밟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 〈5월 주제: 「진로교육법」 1년의 성과와 전망〉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상급학교 진학과 일류대학 진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시중심교육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왔다. 입시중심의 교육은 실제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즉, 학생의 성장과 발달 추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능력 등을 키우는 것과는 크게 벗어나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목표로 교육의 방향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도 필요하다. 많은 직업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등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진로교육과 함께 길러 주어야 할 역량일 것이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는 「진로교육법」 제정 1년을 맞이하여 진로교육의 현재 성과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과 향후 과제
- ◆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영향 요인
- ◆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 전공과 운영 활성화 방안
- ◆ 청소년 진로체험지원 인력으로서 퇴직 시니어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